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운명의 '입법 레이스'... 해법 관심

이달 말 발의, 2월 국회 통과 배수진... 7월 출범 가시화 지속성이 관건, 명칭·청사·쏠림 우려, 공론화 등은 숙제 대통령 "수도권 1극 깨는 생존전략... 끝까지 책임" 약속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 발의가 이달 말로 예고된 가운데 운명의 입법 레이스를 통해 기대와 우려를 모두 보듬을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 특례와 지속성을 담보할 법적장치를 비롯해 명칭, 청사 위치·자치분권, 각급 지자체 위상 문제까지 난제도 적지 않아 법제화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협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근거인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이달 말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18명) 공동 발의 형식으로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경우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 후 7월1일 통합지방정부인 가칭 '광주·전남 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특별법안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에 특례는 고유특례와 신설 특례를 합쳐 300개 안팎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7장 21절 296개 조문, 257개 특례)보다 편·장·조·특례 모두 조금씩 많다. 특별법에는 '광주정신'도 명확히 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릴레이 주민 공청회도 연일 이어지고 있

다. 기대와 우려, 대안 제시가 봇물을 이루면서 특별 법안은 상당 부분 세부 조정과 디테일 수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간담회와 TF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모아진 기대효과로는 ▲과격적 재정 지원을 통한 25조원 '슈퍼 지자체' 탄생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에너지·신산업을 주축으로 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교육·지방 분권형 자치 강화 ▲행정 일원화 등이다.

반면 우려스런 대목으로는 ▲대도시 쏠림(이른바 빨대 효과) ▲재정 지원의 한시성(4년 20조원) ▲다른 방식에 따른 민주적 합의 미흡 ▲자치구와 교육청의 권한과 위상 문제 ▲전남 미니 지자체 소멸 논란 ▲명칭과 청사 위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불이의 배제 원칙과 균형 발전기금 조성, 권한 이양의 법제화, 범시도민협의체 구성과 집중 공청회 등이 제시되고 실제 실행되고는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입법 과정에서 특별법안에 담길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은 광주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2차 조찬 간담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영양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도민의 뜻이 최종 법안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금은 작은 차이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 큰 단결, 통 큰 함의로 작은 문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광역 통합의 필요성과 책임 행정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축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한 뒤 "정치적 유희에 따라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고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내 행·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광주·전남 통합 명칭·청사 의견 분분... "빅딜" "큰 줄기 봐야"

양부남 "광주전남 명칭이면 청사는 전남... 토론하자" 강기정·김영록 "작은 논란은 소모적, 통큰단결 중요"



양부남(왼쪽)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의원 행정통합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후 사용할 명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는 "지금 큰 줄기를 봐야 한다"며 거리를 두는 반면 양

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토론회 등을 통한 논의"를 제안해 의견차를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의 의원회관에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를 연 이후 일주일만의 회동으로 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명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 "명칭은 역사성·정체성·상징성을 담아내는 문제"라며 "광주·전남특별시가 아닌 전남·광주특별시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가 지닌 역사적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광주특별시'로 해야 하며 도청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통합청사는 광주 사무지구에 두고, 무안과 순천에 각각 제2, 3청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별시·특별도로 명칭을 사용해도 기존 22개 시·군 5개 자치구 권한에 있어서 전혀 불이

의가 없다"고 전제하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청사 소재지는 전남,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면 광주시에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칭 문제와 함께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보통교부세를 상향·하향 평준화 할 것인지 등도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도 "양 위원장의 명칭 빅딜"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통큰단결이 필요하고 작은 문제대해선 약간 뒤로 미루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명칭 토론 제안에 시·도지사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때가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명칭 등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게 된다"며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인냐, 특례로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도 "도민 공청회를 가면 여러 욕구가 분출해 (명칭 등) 작은 이야기도 나온다"며 "그런 것보다 특별시가 됐을 때 제도, 조례를 수용해 모든 걸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에너지·AI·문화·농수축산'

광주·전남 통합 고유·신설 특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초안에 대한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2차 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에너지·인공지능(AI)·문화·농수축산업 등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특례'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통합 특별시장이 에너지·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지정·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명시돼 최종 반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 18명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조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 15일 공개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특별법에는 광주와 전남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특례 73건이 명시됐다.

에너지 분야는 총 20개 조항으로 우선 정부와 연계·협력을 통해 재생 에너지 도시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특별시장이 공동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면허여업을 허용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발전설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국비로 유지관리 등이 담겼다.

영농형태양광 지구도 특별시장의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전력망 구축을 위해 특별시장이 요청할 경우 송배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정했다.

11개 조항의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특례에는 지방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도 제한없이 출자·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용자·상환기간 연장·이자율 할인 등도 포함됐다.

또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를 통해 특별시장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정부는 인공지능컴퓨팅센터 등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부여했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 의무도 포함됐으며 특별시를 AI 중심도시로 지정해 20년동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부담금을 전부 감면하고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국립치의학연구원·이차전지산업·지능형 로봇산업·합정유지보수관리 클러스터 우선건설, 석유·화학·철강·조선산업전환 특구 지정을 특례조항에 담았다. 이 밖에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시가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하고 국제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 외국인 문화예술인·관광객 체류기간 부여, 관광특구 면적 변경,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권을 설치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농수축산업 특례 조항에는 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생성·표준화·공유·거래와 첨단 농식품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을 특별시가 주도하고 특별시장이 불순환 축진구역 지정하고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날 논의에서는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돼 있는 조정교부금 재원을 특별시로 통합하기 위한 방안과 기준인건비 적용, 산업단지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로 육성,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의 특례를 신설했다.

특별법 초안은 이달 말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와 정부 협의,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2월28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뉴시스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썹(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